남원시의회,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 '부결' 처리

발목잡기 논란 확산 조짐

최경식 시장 "집행부 견제 범위 벗어난 일"
전평기 의장 "입법예고 전 사전 협의 없어"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남원시'를 기치로 출범한 전북 남원시의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남원시의회가 부결 처리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경식 시장이 7일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조직 슬림화를 문제로 부결시킨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민선 8기 남원시는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장기 남원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30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제255회 정례회' 중 지난 6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통해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으로, '경제농정국'을 '문화농산업정책국'으로, '안전건설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홍보실'과 '전략분석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 단위 부서 개편을 통해 소관 부서가 일부 조정되는 안이 포함됐다.

최경식 시장은 입장문에서 "항공산업, 스마트농업 등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컨트롤타워 및 전략분석실 신설,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 원스톱 인허가상담창구 운영 등 조직을 신설 정비하고 쇠퇴·감소하고 있는 사무를 통·폐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개월 동안 시민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용역을 통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의회에 현안사항 보고와 제안 설명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정책간담회 및 수차례에 걸쳐 수정 협의한 조직개편안이 6일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조직개편안의 부결 원인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농업 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를 벗어나 문화산업정책국에 포함된 것은 지역 현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과 하나의 국이 시의회 양대 상임위로 갈라지게 되는 점도 문제라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집행부에 조직개편안을 두고 사전협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사실상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 관계자의 설명은 전평기 의장의 답변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먼저 "농업 관련 부서의 문화산업정책국 편입은 농업도 산업의 일종으로서 전반적인 '산업부흥'이란 측면에서 틀리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상임위 소관이 갈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변화를 꾀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다르게 의회는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틀로서만 집행부를 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즉 의회가 상임위에서 어떤 부서를 소관으로 할지는 의회가 논의해 결정할 일일 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전날에야 전달받았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전날 부결된 조직개편안은 11월 30일자 입법예고지만 이미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차 입법예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가 보류시켰고 그에 따라 다시 의회와 수차례의 공식 또는 비공식 협의를 거쳐 그 결과로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의회를 무시한 소통의 부재란 지적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전평기 의장이 답변한 부결 원인 중 농업 관련 부서의 문화산업정책국 편입에 대한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 업무에 따른 입장 차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전날에야 조직개편안을 받아봤고 이런 집행부의 행위가 부결의 원인이 됐다는 전 의장의 답변은 '입법예고'의 기능 자체가 관련된 여러 계층에 내용을 알리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1차 보류됐던 조직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8일간이나 됐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을 놓고 의회의 결정은 시민을 위한 것보다는 "의회의 위상이 먼저였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지역 내 일각에서는 의회의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을 의회와 최경식 시장이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뉴시스

지난 11월 25일 열렸던 남원시의회의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경식 시장이 남원시의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최 시장 뒤로 전평기 시의회 의장이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약속

민주 안호영 의원, 쌀전업농연합회 임원들 만나 애로 청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7일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2022년 쌀 소비촉진 홍보 및 브랜드쌀 전시회' 부스 운영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은만 회장과 임병희 사무총장 등 연합회 임원들을 찾아 응원의 뜻을 전했다.

안호영 의원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소모적인 정치공세와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민주당만큼이라도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여순사건 특별법, 왜 전북인가?

도의회, 재조명 토론회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도내 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7일,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이 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왜 전라북도인가?'라는 주제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여순항쟁을 주제로 한 박금만 화가의 전시회도 동시에 개최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으며, 이후 7년에 가까운 진압 과정에서 여수, 순천을 비롯해 전북과 경남지역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여순사건위원회 주철희 박사는 "피해자 유족이 지난 70여년을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왔고 통곡조차 죄가 되었던 세상에서 국가는 없었고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서 여순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북의 피해상황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여순위원회는 남원지역에 직권조사를 의결했지만, 전북지역은 여전히 여순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라며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정린(남원1) 의원은 "해방 직후 남원지역은 좌익과 우익, 군대와 경찰 간 극심한 대립으로 민간인 학살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여순사건을 계기로 지리산 일대 주민 학살이 무참히 자행돼 아직도 제삿날이 같은 마을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난이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진상규명 신고기한이 내년 1월 20일로 도래해 신고기한 연장과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작

"유치원 지원 예산 편성시 전북도와 적극 사전 협의를"

임승식 도의원

김성수 도의원

김정기 도의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지난 4일간 전북도 예산안 심사를 벌인데 이어, 7일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한 갈등과 관련, 교육청과 전북도청과의 협의 부족에서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전북교육청은 유아 정책과 관련해 도내 전체 유아에 대한 지원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치원 지원 예산 편성시 전북도청과 보다 적극적인 사전 협의를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도교육청의 방대해진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교육재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기금 적립이라고는 하나, 전북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금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현재 지자체로부터 전입받아 추진하는 사업들과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2023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또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교직원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도교육청 감사에 대해서는 늑장대응 및 소극성을 꼬집으며, 선제적 감사를 통한 문제 예방과 능동적·적극적 감사 자세를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오늘 정책질의의 핵심은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생의 중요성임을 강조하며, 현재 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도교육청 기금 조성 재원 규정위반"

박용근 도의원, "출연금 아닌 전임금으로 운용"

전북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조성이 위법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7일 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 조성이 관련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도교육청에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관련된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북도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다. 각각의 조례에는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며, 모두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더욱이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의 관련법인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토록 규정돼 있다.

출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하고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박용근 의원은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전출금보다 엄격한 예산과목이다"며 "기금조성을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기자